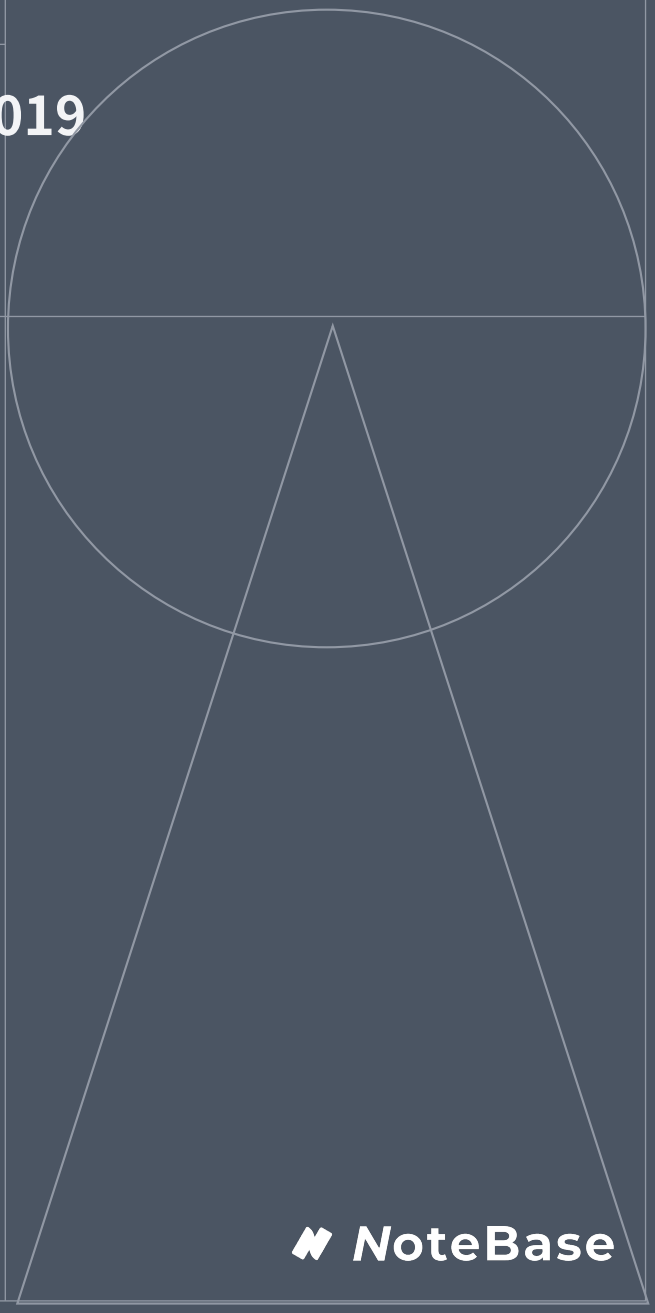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9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9

문 1.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편익원칙에 기초한다.

② 특정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③ 전체 재정활동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⑤ 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목적세의 의미와 장단점, 우리나라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목적세는 거둔 세금을 특정한 지출 목적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 둔 조세이다. 특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부담과 편익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지만, 예산 운용을 경직시키고 전체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할 수 있다.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조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목적세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그 서비스와 관련된 부담으로 조달하므로 조세 부담과 편익의 대응을 중시하는 편익원칙에 기초한다.
② O — 세수의 사용처가 특정 분야에 묶이므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③ O —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고정하면 사회적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재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기 어려워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이다. 2019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며, 국세인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해당한다.
⑤ O — 목적세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 목적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므로 그 목적의 존속 기간에 맞추어 과세 기한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거나 특정 정책에 활용된다는 점과 세법상 목적세 분류를 혼동하기 쉽다. 세수의 귀속·활용 방식만으로 목적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세로 분류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수의 용도가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목적세, 일반 재정 수요에 사용되면 보통세로 구분한다. 이어서 목적세는 재원 안정성과 편익원칙에는 유리하지만 예산의 경직성과 재정 전체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양면성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목적세는 용도 지정, 재원 안정, 편익 연계가 장점이고 재정 경직이 단점이다. 2019년 국세 목적세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세이다.

NoteBase

문 2.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② 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변화한다.

③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④ 선형누진세는 비선형누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⑤ 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두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서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형누진세는 면세점 초과 소득에 일정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이다. 세액을 $T = t(Y - a)$로 나타내면 한계세율 t는 일정하지만, 평균세율 $T/Y = t(1 - a/Y)$는 소득 Y가 늘수록 상승한다.
비선형누진세는 소득구간 등에 따라 한계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누진세이므로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함께 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누진세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전체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보다 높아 평균세율이 상승한다.
② O. 비선형누진세는 소득에 따라 세액함수의 기울기인 한계세율이 달라지고, 그 결과 평균세율도 함께 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이다. 선형누진세에서는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④ O. 선형누진세는 면세점 이후 한계세율이 일정하므로 고소득 구간에서 한계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비선형누진세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⑤ O. 선형누진세는 일정 소득까지 세액이 0이 되는 면세점 a를 두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선형'이라는 말을 한계세율뿐 아니라 평균세율도 일정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선형누진세에서 일정한 것은 세액함수의 기울기인 한계세율이고, 면세점 때문에 평균세율은 상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액함수의 기울기를 보면 한계세율을,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보면 평균세율을 판단한다. 면세점이 있는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 일정, 평균세율 상승'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이 있고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상승한다. 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함께 변한다.

NoteBase

문 3.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때 실현된다.

② 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③ 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인 물품세를 부과해야 성립한다.

④ 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⑤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최적물품세의 램지규칙·역탄력성 규칙과 콜렛-헤이그 규칙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램지규칙: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물품세가 만드는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율을 정하는 원칙이다. 재화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같게 하는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보상수요를 이용한다.
역탄력성 규칙: 재화 간 수요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램지규칙에서 도출되는 특수한 결과로,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와 보완관계가 강한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노동소득세로 인한 여가 선택의 왜곡을 완화하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램지규칙은 일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제약 아래 물품세의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이다.
② O —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발생하므로 램지규칙의 최적 세율구조는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를 기준으로 도출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이다. 이는 역탄력성 규칙의 기준이며, 콜렛-헤이그 규칙은 여가와의 보완·대체 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한다. 올바르게는 여가의 보완재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역탄력성 규칙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필수재의 수요가 대체로 비탄력적이고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크다면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⑤ O — 한 재화에서 추가 조세수입을 얻을 때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다른 재화보다 작으면 그 재화의 세금을 늘려 총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최적점에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역탄력성 규칙의 '자기 가격탄력성'을 콜렛-헤이그 규칙의 기준으로 바꾸어 붙인 선지이다. 콜렛-헤이그 규칙의 핵심 기준은 해당 재화 자체의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여가와의 보완·대체 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연결하면 역탄력성 규칙, 세율과 여가의 보완·대체 관계를 연결하면 콜렛-헤이그 규칙으로 판단한다. 램지규칙은 일정한 세수 아래 총초과부담 최소화와 재화별 한계초과부담의 균등화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는 초과부담 최소화, 역탄력성은 비탄력적 재화에 고율, 콜렛-헤이그는 여가의 보완재에 고율이다.

NoteBase

문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②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③ 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수요곡선으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초과부담이 왜 발생하는지와 세율·수요의 가격탄력성·보상수요가 초과부담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생산 선택을 왜곡할 때, 정부의 조세수입을 넘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후생손실이다. 중립세는 민간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아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세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이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질수록 조세로 인한 거래량 변화와 초과부담이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조세가 재화 간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면 민간의 소비·생산 선택이 달라지고, 이 왜곡에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② O —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정액세가 이에 가까운 조세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이다. 실제로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세율이 높아질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조세수입도 세율 상승에 따라 언제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세율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④ O —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로 인한 수요량 변화가 커지므로 초과부담도 커진다.
⑤ O — 초과부담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에서 발생하므로,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세율과 초과부담의 관계를 반대로 제시하고, 조세수입이 세율과 함께 항상 증가하는 것처럼 단정한다. 세율 상승은 왜곡을 확대하지만 조세수입의 증가를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는지, 그 결과 거래량과 민간의 선택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먼저 본다. 상대가격의 왜곡이 크고 수요·공급 반응이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이 크며, 세율 상승과 조세수입의 관계는 단조롭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상대가격 왜곡과 대체효과가 초과부담을 만들며, 세율·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부담도 커진다.

NoteBase

문 5.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누진세의 경우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②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

③ 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④ 소득공제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선형누진세의 구조와 세액공제·소득공제가 한계세율, 상대가격, 조세의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형누진세: 소득에 일정한 한계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는 방식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세율은 높아지지만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한다. 일반적인 정액 세액공제는 세후소득의 절편을 바꾸지만 기울기인 한계세율은 바꾸지 않는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 누진세에서는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액 감소가 더 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선형누진세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다만 고정 공제액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어 평균세율은 상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이다. 일반적인 정액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므로 평균세부담을 낮추지만 한계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키지 않는다'이다.
③ O —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은 대체로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누진세에서는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더 높으므로 동일한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클 수 있다.
④ O — 특정 재화의 구입액만 소득에서 공제하면 그 재화의 실질적인 구입비용이 낮아진다. 따라서 공제 대상 재화와 다른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이 변할 수 있다.
⑤ O —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빼면 명목상 총소득이 같더라도 실제 담세력이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같은 담세력에는 같은 세부담을 지우려는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한계세율이 변하는 것을 혼동하게 한다. 정액 세액공제는 세액 수준을 아래로 이동시키지만 추가 소득에 붙는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또한 ③에서는 소득공제액이 같아도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지, 산출세액에서 빠지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소득공제는 '공제액 × 한계세율'만큼의 절세효과를 만들고, 정액 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줄이되 한계세율은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 일정·평균세율 상승, 소득공제는 고세율자에게 더 큰 절세효과, 정액 세액공제는 세액만 직접 차감한다.

NoteBase

문 6.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생산물 1단위당 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300원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단, 수요곡선: $P = 6,000 - 4Q$, 공급곡선: $P = 2Q$, P: 가격, Q: 수량)

① 50원

② 100원

③ 200원

④ 250원

⑤ 300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단위세가 부과된 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액만큼의 격차가 생긴다는 원리를 이용해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가격: $P_c = 6,000 - 4Q$
공급가격: $P_p = 2Q$
단위당 세금: 300원
세후 가격 관계: $P_c - P_p = 300$
소비자 부담: 세후 소비자가격에서 세전 균형가격을 뺀 금액이다.

사용할 공식

세전 균형은 $P_c = P_p$로 구한다. 세후 균형은 단위세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 사이의 쐐기를 만들므로 $P_c - P_p = 300$을 사용한다. 소비자의 단위당 조세 부담은 $P_c^{tax} - P^*$이다.

계산 과정

1. 세전 균형을 구한다.
$6,000 - 4Q = 2Q \Rightarrow Q^* = 1,000, \quad P^* = 2,000$
2. 세후 균형수량을 구한다.
$(6,000 - 4Q) - 2Q = 300 \Rightarrow 6Q = 5,700 \Rightarrow Q^{tax} = 950$
3. 세후 소비자가격은 $P_c^{tax} = 6,000 - 4(950) = 2,200$원이고, 생산자가격은 $P_p^{tax} = 2(950) = 1,900$원이다. 두 가격의 차이는 300원이다.
4. 소비자의 부담은 $2,200 - 2,000 = 2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세후 소비자가격 2,200원에서 세전 균형가격 2,000원을 뺀 200원이다.
② X — ‘1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가 단위당 200원을 부담한다.
③ O — 소비자가격이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상승하므로 소비자 부담은 200원이다.
④ X — ‘25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 부담이 200원이고 생산자 부담이 100원이다.
⑤ X — ‘300원’은 총 단위세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뜻이어서 틀리다. 올바르게는 300원 가운데 소비자가 200원, 생산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오답 포인트

300원은 정부가 걷는 단위당 세액이지 곧바로 소비자의 부담액이 아니다. 세전 균형가격과 세후 소비자가격을 비교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200원, 생산자가 100원을 나누어 부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전 균형가격을 구한 뒤, 세후에는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를 단위세와 같게 놓는다. 마지막으로 세후 소비자가격의 상승분은 소비자 부담, 세후 생산자가격의 하락분은 생산자 부담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는 $P_c - P_p = t$의 가격 쐐기를 만들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합은 단위세와 같다.

NoteBase

문 7.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③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④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⑤ 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 그리고 탈세 억제수단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위험기피적인 납세자가 적발확률과 벌금을 고려하여 신고소득을 선택한다고 보는 기대효용 모형이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의 한계이익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지만,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면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인다. 따라서 세율 인상이 전체 탈루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일반적으로 불분명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세율이 오르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 1원당 절약되는 세금이 커지므로 탈세의 상대적 이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이며, 올바르게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이다.
② O — 탈세는 소득 은폐나 허위 신고처럼 세법을 위반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이다. 조세회피는 법이 허용하는 형식이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탈세와 구별된다.
③ O — 적발확률을 높이려면 조사 인력과 정보수집 등 행정비용이 들지만, 벌금 인상은 모형상 같은 억제효과를 더 낮은 행정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비용만 비교하면 높은 벌금이 바람직하다.
④ O — 이 모형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낮아지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을 가정한다. 이 가정 아래에서 세율 상승으로 부가 감소하면 위험한 탈세를 줄이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⑤ O —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탈세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된다. 또한 소득계층별 실제 세 부담의 분포가 달라져 수직적 공평성도 훼손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뒤바꾼 선지이다. 대체효과는 탈세의 수익성을 높여 탈루소득을 늘리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아래의 소득효과는 부의 감소로 위험감수를 줄여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 변화 문제에서는 먼저 '탈세 1원당 절약되는 세금'으로 대체효과를 판단하고, 그다음 세후 부의 감소와 위험기피 성향으로 소득효과를 판단한다.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전체 효과와 개별 효과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세율 상승: 대체효과는 탈세 증가, 소득효과는 탈세 감소, 순효과는 불분명하다.

NoteBase

문 8.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②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③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⑤ 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의 차이, 희생설의 학자별 주장, 동등절대희생과 누진도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익원칙은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조세 부담을 정하는 원칙이며,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본다. 능력원칙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정하는 원칙이다. 동등절대희생은 과세로 감소하는 효용의 절대량을 납세자마다 같게 하는 원칙이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eta = -YU''(Y)/U'(Y)$라고 할 때, 동등절대희생 아래에서는 $\eta > 1$이면 누진과세, $\eta = 1$이면 비례과세, $\eta < 1$이면 역진과세가 도출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빅셀과 린달은 편익원칙을 자발적 교환의 관점에서 발전시켰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의 대가로 파악한다.
② O. 수수료·통행료·사용료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이용이나 편익과 부담액을 연결하므로 편익원칙의 대표적 사례이다.
③ O. 능력원칙의 수직적 공평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이다.
④ O. 밀은 과세로 인한 희생이 납세자 사이에서 동등해야 한다는 동등희생설을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⑤ X. 틀린 표현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이다.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에서 누진과세가 정당화되는 것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이다. 1이면 비례과세, 1보다 작으면 역진과세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한계효용이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만으로 누진과세가 된다고 오인하게 만든다. 감소 여부가 아니라 감소 속도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이 기준이며, 동등절대희생에서는 그 값이 1보다 커야 누진적 부담이 성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부담을 연결하면 편익원칙, 경제적 능력과 부담을 연결하면 능력원칙으로 판단한다.
동등절대희생과 세율 구조를 묻는 경우에는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1과 비교하여 '1 초과는 누진, 1은 비례, 1 미만은 역진'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편익은 서비스의 대가, 능력은 납세 여력이다. 동등절대희생에서는 탄력성 1 초과가 누진이다.

NoteBase

문 9. 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을 m 이라고 할 때, 보조금은 $S = m - tE$ (단, E는 스스로 번 소득)이다. 부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진적 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이다.
ㄴ. 소득세의 납부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ㄷ. 어떤 사람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m/t이면, 보조금은 0(*zero*)이다.
ㄹ. 재분배효과는 m 이 클수록 커진다.
ㅁ.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① ㄷ,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에서 보조금 공식 $S = m - tE$와 근로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의 변화를 이용해 각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m은 소득이 없을 때 보장되는 기초수당이고, t는 스스로 번 소득 E가 늘어날 때 보조금이 줄어드는 비율이다.
보조금이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은 $E = m/t$이다.
근로소득과 보조금을 합한 처분가능소득은 $Y = E + S = m + (1 - t)E$이다.

사용할 공식

$S = m - tE$
$Y = E + S = m + (1 - t)E$
첫째 식은 보조금의 크기와 지급 종료점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둘째 식의 기울기 $1 - t$는 근로소득이 늘 때 실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 주므로 근로유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ㄱ. O.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세금을 받는 대신 음(-)의 세금, 즉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누진적 소득세제를 저소득 구간까지 연장한 구조이다.
ㄴ. O. 별도의 현물급여가 아니라 소득세 체계 안에서 정부가 납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ㄷ. O. $E = m/t$를 대입하면 $S = m - t(m/t) = 0$이 된다.
ㄹ.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m이 커지면 모든 소득수준에서 보조금 S가 커지고 보조금 지급이 끝나는 소득 m/t도 높아져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ㅁ. X. $Y = m + (1 - t)E$에서 t가 커질수록 추가 근로소득의 실질 보상인 $1 - t$가 작아지므로 근로의욕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ㄱ, ㄴ, ㄷ, ㄹ이다.

선지 판단

① X. 'ㄷ, ㅁ'은 옳지 않다. ㄷ은 옳지만 ㅁ은 틀렸고, 옳은 ㄱ·ㄴ·ㄹ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② X. 'ㄱ, ㄴ, ㄷ'은 옳은 진술만 포함하지만 옳은 ㄹ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③ X. 'ㄴ, ㄹ, ㅁ'은 옳지 않다. ㅁ은 틀렸고, 옳은 ㄱ·ㄷ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④ O. 'ㄱ, ㄴ, ㄷ, ㄹ'은 모두 옳고, 틀린 ㅁ을 제외한 조합이다.
⑤ X. 'ㄱ, ㄴ, ㄷ, ㄹ, ㅁ'은 틀린 ㅁ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ㅁ의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이다. t가 커지면 근로소득 증가분 중 보조금 삭감으로 사라지는 몫이 커지고 실제로 남는 몫 $1 - t$는 작아진다. 또한 ②는 맞는 진술만 모았지만 ㄹ을 누락한 불완전한 조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자체는 $S = m - tE$, 근로유인은 처분가능소득 $Y = m + (1 - t)E$로 나누어 판단한다. 각 진술의 O/X를 먼저 확정한 뒤 조합 선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m 증가 → 보장수준·재분배효과 증가, t 증가 → 보조금 삭감률 증가·근로유인 감소이다. 보조금 0의 기준소득은 m/t이다.

NoteBase

문 10.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은 사회적 격변기에 정부지출 수준이 급속히 높아져 일정기간 유지되면, 추세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불렀다.
ㄷ. 보몰(W. Baumol)은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팽창하게 된다고 보았다.
ㄹ. 부캐넌(J. Buchanan)은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세형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공경비 팽창을 설명한 학자와 대표 이론을 연결하고, 각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바그너: 소득 증가와 공공부문의 상대적 팽창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행정·복지·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고 본다.
피코크·와이즈만: 전위효과 — 전쟁·재난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조세부담 허용 수준과 정부지출이 급등하고, 격변이 끝난 뒤에도 지출이 종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아 지출 추세가 위로 이동한다고 본다.
보몰: 비용질병 — 노동집약적 공공부문은 생산성 향상이 더디지만 임금은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는 민간부문을 따라 상승하므로 공공서비스 비용과 공공지출이 증가한다고 본다.
부캐넌: 편익의 집중과 비용의 분산 —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가 직접 인식하지만 비용은 조세로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개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게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다. ‘ㄱ, ㄷ’은 ‘ㄱ,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ㄱ과 ㄹ이 빠져 있다. ‘ㄴ, ㄷ’은 ‘ㄱ,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ㄱ, ㄴ, ㄹ은 옳지만, 보몰의 비용질병을 설명한 옳은 ㄷ이 빠져 있다. ‘ㄱ, ㄴ, ㄹ’은 ‘ㄱ,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ㄱ, ㄷ, ㄹ은 옳지만,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를 설명한 옳은 ㄴ이 빠져 있다. ‘ㄱ, ㄷ, ㄹ’은 ‘ㄱ,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O — ㄱ은 바그너의 법칙, ㄴ은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 ㄷ은 보몰의 비용질병, ㄹ은 부캐넌의 편익 집중·비용 분산 논리와 각각 일치하므로 네 진술이 모두 옳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ㄴ의 전위효과를 격변기 동안의 일시적 지출 증가로만 보거나, ㄷ의 생산성 정체를 임금 정체로 오해하면 옳은 진술을 제외하게 된다. 전위효과는 격변 이후에도 높아진 지출 수준이 남아 추세선이 상방 이동하는 현상이고, 보몰의 설명은 낮은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상승이 결합하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별 연결어를 먼저 확인한다. 바그너는 소득 증가와 공공부문 비중 확대, 피코크·와이즈만은 사회적 격변과 전위효과, 보몰은 생산성 격차와 비용 상승, 부캐넌은 편익 집중과 조세비용 분산으로 연결한다. 각 진술을 먼저 판정한 뒤 옳은 항목이 모두 포함된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바그너=소득, 피코크·와이즈만=격변과 전위, 보몰=생산성 격차와 비용질병, 부캐넌=편익 집중·비용 분산이다.

NoteBase

문 11.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②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③ 초과부담 측정은 임금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보상된 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④ 대체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후생 순손실을 의미한다.

⑤ 노동공급량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이 노동공급의 대체효과와 보상노동공급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가 노동과 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어 노동공급을 왜곡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생 순손실이다. 소득효과는 세수라는 이전을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에는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노동공급곡선으로 대체효과만 파악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이 높고 보상노동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공급 왜곡과 초과부담이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부분은 옳지만,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실제로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보상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세후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대체반응이 커져 초과부담이 증가한다.
② O — 근로소득세가 세후임금을 낮추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이 대체효과가 클수록 노동공급 왜곡과 초과부담이 커진다.
③ O — 초과부담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에서 생기는 후생손실이므로, 임금률 변화의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해 측정한다.
④ O —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세후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후생 순손실을 뜻한다.
⑤ O — 근로소득세로 줄어든 노동공급자 잉여 중 정부의 조세수입은 사회 내부의 이전이므로 순손실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뺀 부분이 초과부담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세율이 높을수록'이라는 맞는 설명 뒤에 탄력성의 방향을 뒤집어 놓았다.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세후임금 변화에 노동시간이 크게 반응하므로 왜곡과 초과부담도 커진다. 또한 소득효과까지 포함한 통상적 노동공급 반응이 아니라 보상노동공급의 대체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문제에서는 먼저 소득효과를 제외하고 대체효과만 본다. 그다음 세율과 보상노동공급 탄력성이 커질수록 노동공급 왜곡과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방향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의 손실이며, 세율과 보상노동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NoteBase

문 12. 조세부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여가와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② 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

③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된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④ 재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⑤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세부담능력을 소득·소비·재산 중 무엇으로 평가할 때 생기는 장점과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득 기준은 일정 기간 새로 얻은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만, 여가의 가치·귀속소득·물가상승을 완전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소비 기준은 소득 가운데 실제 소비한 부분을 부담능력으로 보며, 공제·면세·세율 구조를 달리하면 누진성을 부여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보유한 자산을 부담능력의 지표로 보지만, 거래되지 않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같은 임금률과 잠재적 소득능력을 가진 사람도 여가 선호가 강하면 노동시간과 실제 소득이 적어진다. 실제 소득만 기준으로 과세하면 이러한 여가와 노동의 선택 차이를 부담능력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이다. 소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초소비 공제, 면세 범위, 차등세율 또는 누진적 지출세 구조를 이용하여 소비 규모가 클수록 부담률이 높아지게 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해도 제도 설계에 따라 누진과세가 가능하다'이다.
③ O — 자가주택 거주 서비스나 자가생산처럼 시장거래 없이 얻는 귀속소득은 금액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소득 과세대상에 완전하게 포함하기 어렵다.
④ O — 재산은 종류가 다양하고 거래가 드문 자산도 있어 시가를 계속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 가치의 평가 문제가 재산 기준 과세의 한계가 된다.
⑤ O —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명목 과표구간이 고정된 누진소득세에서는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과표구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소비세를 일반적인 단일세율 간접세로만 생각하면 ②의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에 속기 쉽다. 소비라는 평가기준과 세율·공제 등 과세방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비 기준 자체가 누진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기준의 측정 대상을 먼저 구분한다. 소득은 여가·귀속소득·인플레이션, 소비는 제도 설계에 따른 누진성, 재산은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연결하여 판단한다. ‘불가능하다’와 같은 단정 표현은 공제나 차등세율로 예외를 설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은 여가·귀속소득·물가, 재산은 가치평가가 약점이며, 소비 기준도 누진 설계가 가능하다.

NoteBase

문 13.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경제적 능력 소유자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② 수평적 공평성은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③ 납세 이후에도 개인의 효용수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⑤ 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구분하고, 누진과세가 어느 공평성과 관련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평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원칙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그 차이에 맞는 조세부담을 지우는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클수록 더 높은 부담을 지우는 누진과세와 연결된다.
재순위화 방지 원칙은 조세 때문에 납세자 사이의 효용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공평성 기준이다. 포괄적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하게 과세하는 데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의 기본 내용이다.
② O — 수평적 공평성을 적용하려면 누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졌는지를 먼저 정해야 하므로, 경제적 능력의 측정 기준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
③ O — 납세 후에도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조세로 인한 재순위화를 피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요청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이다. 누진세율을 강화하면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므로, 일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한다.
⑤ O — 포괄적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과 형태가 달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는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누진과세를 단순히 세부담 증가로 보고 공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데 있다. 누진과세는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에게 더 높은 부담을 지우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같은 방향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능력에 같은 부담’이면 수평적 공평성, ‘다른 능력에 다른 부담’이면 수직적 공평성으로 판단한다.
누진세율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한다.

암기 포인트

수평은 같은 능력에 같은 세금, 수직은 큰 능력에 더 큰 세금이다. 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누진과세는 수직적 공평성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14. 누진적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율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② 누진세율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③ 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편익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

⑤ 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누진세의 공평성·효율성 효과와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세부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력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경제력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편익원칙에서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므로,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소득 증가율보다 편익과 그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율이 높아져 누진세가 정당화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누진세제가 복잡해지면 각종 공제·감면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여지가 커지고, 고소득자가 이를 더 잘 활용하면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약화되어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② O — 높은 한계세율은 추가 근로·저축·투자에서 얻는 세후 보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활동의 유인을 약화하고 효율성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③ O — 누진세를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면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는 두 기간의 평균소득이 같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자보다 총세액이 커질 수 있다. 경제력이 같아도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이다. 편익원칙에 따르면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편익과 세부담은 소득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역진적 세부담이 정당화된다. 올바르게는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누진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O —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세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므로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편익이 소득과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만 보고 누진세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핵심은 증가 여부가 아니라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지이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편익과 세부담이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하여 평균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편익원칙과 소득탄력성이 함께 나오면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누진적, 1이면 비례적, 1보다 작으면 역진적인 세부담이 정당화된다.

암기 포인트

편익의 소득탄력성: 1 초과는 누진, 1은 비례, 1 미만은 역진이다.

NoteBase

문 1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③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줄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④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⑤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구조와 점증·평탄·점감 구간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이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늘 때 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나뉜다. 노동공급에 대해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작용할 수 있고 그 방향은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전통적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조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는 설명이다.

② O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 구성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

③ O
점증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도 늘지만, 평탄구간에서는 장려금이 더 늘지 않고 점감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 작아지는 구조이다.

④ O
근로소득이 있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현금급여보다 근로유인을 보존하면서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노동공급에 아무 영향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제도라는 뜻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이다. 실제로는 장려금 지급으로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대체효과도 구간에 따라 방향이 다르다. 점증구간에서는 양의 대체효과와 음의 소득효과가 함께 나타나 총효과가 불확정이고, 평탄구간에서는 음의 소득효과, 점감구간에서는 음의 소득효과와 음의 대체효과가 나타나므로 노동공급 효과를 일률적으로 소폭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⑤는 근로장려금이 근로소득에 연동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체효과만 있다고 오인하게 만든다. 장려금 자체가 가처분소득을 늘리므로 소득효과가 존재하며, 장려금 산정구간에 따라 한계적인 근로보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먼저 점증·평탄·점감 중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한 다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각각 판단한다. '소득효과가 없다'거나 '모든 구간에서 노동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단정은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점증은 대체효과 양·소득효과 음, 평탄은 소득효과 음, 점감은 대체효과 음·소득효과 음이다.

NoteBase

문 16.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②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③ 토빈의 q이론에 따를 경우, 자본의 대체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④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상각 제도의 채택,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토빈의 q를 통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계실효세율의 정의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보유·사용할 때 부담하는 기회비용이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목표 자본스톡과 투자가 증가한다.
토빈의 q는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시장가치를 그 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q가 높을수록 새 자본을 설치할 유인이 커진다.
한계실효세율은 한계투자의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차이가 세전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전수익률을 p, 세후수익률을 s라 하면 $\frac{p-s}{p}$로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질수록 기업이 원하는 자본스톡이 커지므로 투자가 증가한다.
② O. 자본스톡이 사용자비용 변화에 더 민감할수록, 즉 사용자비용탄력성의 절댓값이 클수록 조세로 인한 사용자비용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도 커진다.
③ O. 토빈의 q는 자본의 시장가치를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대체비용이 커지면 q가 낮아져 신규 투자가 줄어든다.
④ X. 틀린 표현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어서'이다. 한계실효세율은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차이를 세전수익률로 나누어 세전수익률-세후수익률세전수익률로 구한다.
⑤ O. 가속상각은 감가상각 공제를 앞당기고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관련 세부담을 직접 낮춘다. 두 제도 모두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비율'과 '조세로 사라진 수익의 비율'을 혼동하게 만든다. 한계실효세율의 분자는 단순한 세전수익률이 아니라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 관련 선지는 '사용자비용 하락 → 목표 자본스톡·투자 증가', '토빈의 q 상승 → 투자 증가'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한계실효세율은 세금으로 줄어든 수익을 세전수익률로 나눈 값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용자비용은 낮을수록 투자 증가, 토빈의 q는 높을수록 투자 증가, 한계실효세율은 '세전·세후 차이 ÷ 세전'이다.

NoteBase

문 17. 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③ 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가 적용되면 조세에 비해 공채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이용시 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

⑤ 공채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채에 대한 고전파와 케인스학파의 관점, 리카도 대등정리, 이용시 지불원칙 및 공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파의 재정관: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을 중시하므로 적자와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본다.
케인스학파의 재정관: 경기침체기에는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를 인정한다.
리카도 대등정리: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공채발행을 미래 조세의 증가로 예상하면 현재의 감세분을 저축하므로, 정부지출을 현재 조세로 조달하든 공채로 조달하든 민간소비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같다는 명제이다.
이용시 지불원칙: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정부투자의 비용을 공채로 조달하고, 미래 수익자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전파경제학은 균형재정을 바람직하게 보고 재정적자와 이를 위한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② O — 케인스경제학은 경기침체기에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용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채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이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경제주체는 공채를 미래 조세로 인식하여 현재의 조세 감소분만큼 저축하므로, 조세조달과 공채조달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대등하다.
④ O — 이용시 지불원칙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처럼 편익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정부투자는 공채로 조달하여 미래 수익자도 상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⑤ O — 공채의 이자와 원금은 조세로 상환되므로 조세부담자와 공채보유자가 다르면 양 집단 사이에 소득이 이전된다. 따라서 공채발행은 본래 목적과 별개로 소득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공채발행이 일반적으로 총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과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혼동하게 한다. 대등정리의 핵심은 공채조달의 효과가 조세조달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두 조달방식의 효과가 같아진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채 관련 선지는 먼저 재정관, 조달효과, 부담배분을 구분한다. '리카도 대등정리'가 보이면 현재의 공채는 미래 조세이고 조세조달과 공채조달의 효과가 대등하다고 판단한다. 장기 공공투자와 미래 수익자의 비용 분담이 함께 나오면 이용시 지불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 대등정리는 '공채는 미래 조세, 조세조달과 효과는 대등'이다. 이용시 지불원칙은 '장기편익은 공채로 미래 수익자도 분담'이다.

NoteBase

문 18.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② 전기, 수도 등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램지가격설정방식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⑤ 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책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요금의 한계비용가격설정,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적자, 램지가격설정, 분배 목적의 낮은 요금이 효율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여 소비자의 추가 편익과 생산의 추가 비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원칙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수 있어 이 방식이 적자를 발생시킨다. 램지가격설정은 수지균형 같은 수입 제약 아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선의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이다. 실제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P = MC$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원칙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효율성 자체와 구분해야 한다.
② O — 전기·수도처럼 이용자가 특정되고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사용재에는 이용량에 따른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게 하여 과다 소비를 억제하고, 일반 조세로 전액 조달할 때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O — 규모의 경제가 지속되는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수 있다. 이때 $P = MC$로 가격을 정하면 총수입이 총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O — 램지가격설정은 수입 제약 아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크게 두어 후생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탄력성이 낮은 필수재 이용자에게 높은 부담이 돌아갈 수 있어 분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O — 분배를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비용보다 낮게 책정하면 요금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부족분을 정부 보조나 조세로 메워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서 생기는 '재정적 적자'를 뒤섞은 선지이다.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적이지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자연독점에서는 손실을 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요금 문제에서는 먼저 효율성 기준과 수지균형 기준을 분리한다.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으면 자원배분은 효율적이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평균비용이 더 높으면 적자가 생긴다. 수지균형 제약이 붙으면 램지가격이 후생손실을 줄이는 차선책이 된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성, 자연독점에서는 적자 가능성, 램지가격은 수지 제약 아래 후생손실 최소화이다.

NoteBase

문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②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④ 티부(C. Tiebout)는 개인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주장하였다.

⑤ 티부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분권의 측정 지표와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를 각각의 성립 조건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오우츠(W. Oates): 지역별 선호가 다르고 중앙공급의 비용상 이점이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면,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에 맞추어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티부(C. Tiebout): 주민이 지역 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선호가 표출될 수 있다. 이를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앙집권화율은 정부부문 총지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몫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이 크므로 재정의 집권·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O.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급비용이 같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면, 지역별 선호에 맞춘 지방정부의 공급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의 통합 공급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분권화 정리의 기본 조건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없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도 없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
④ O. 티부모형에서는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울 때 각자가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하며, 이를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한다.
⑤ O. 티부모형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재원을 재산세로 충당하는 구조를 상정한다. 주민은 지방공공재 수준과 그에 수반되는 재산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거주 지역을 선택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외부성이 없다'는 조건은 맞게 두고 '규모의 경제가 있다'를 끼워 넣었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중앙집권적 공급의 비용상 이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를 적용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우츠는 '지역별 선호 반영을 통한 분권의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그 전제로 중앙공급의 비용상 이점과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티부는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지역 선택'과 '지방공공재·조세 묶음의 선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오우츠는 무규모경제·무외부성 아래 분권화, 티부는 이동을 통한 발에 의한 투표이다.

NoteBase

문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②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제1명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법정 최고 세율은 25%이다.

④ 인플레이션에 의해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⑤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조달, 감가상각공제, 자본구조 및 소득세와의 통합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은 비용의 명목액이 공제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그 공제액의 실질가치를 낮추면 실질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감가상각공제는 기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비용을 여러 기간에 나누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조세방패는 이자비용 같은 손금이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이다.

핵심 구분

부채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부채 사용은 과세소득과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방패를 만든다. 반면 감가상각공제액이 취득 당시의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공제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그 결과 실질 과세소득과 실질 법인세 부담은 커진다. 2019년 당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5%였으므로 법정 최고세율은 25%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우리나라 법인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이 손금에 산입되므로 부채가 늘면 이자비용에 따른 조세방패가 커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② O —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 등 기본 가정 아래 기업가치가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는 명제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최적 부채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O — 2019년 당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했으므로 법정 최고세율은 25%였다.

④ X —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이 줄어 과세소득이 커지므로 법인세 부담은 무거워진다. 틀린 표현은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이고, 올바른 표현은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진다'이다.

⑤ O —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동일한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중복과세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효율성 문제뿐 아니라, 기업소득과 다른 소득 간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공제의 실질가치 하락'을 '세부담 하락'으로 잘못 연결하도록 유도한다. 공제는 클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므로 공제의 실질가치가 작아지면 세부담은 반대로 커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은 '공제의 실질가치가 커지면 과세소득과 세부담이 감소하고, 작아지면 과세소득과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자본구조 문항에서는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모딜리아니·밀러 명제의 가정을 먼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부채이자 손금은 세부담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 하락은 세부담을 높인다.

NoteBase

문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③ 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중립세(neutral tax)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배분 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파레토 효율성,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시장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높이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 완전경쟁시장의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말한다. 제2정리는 적절한 초기 부존자원 재분배와 볼록성 등의 조건 아래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배분은 아직 누군가의 후생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일 여지가 있으므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 배분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 완전경쟁시장의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여 준다'이다.
③ O.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고, 무임승차로 인해 개인의 진정한 지불의사가 시장가격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에서 효율적인 공급량이 형성되기 어려워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④ O. 중립세가 아닌 조세는 상대가격과 경제주체의 선택을 바꾸어 소비·생산·노동공급 등에 왜곡과 초과부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⑤ O.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 한쪽의 행동을 다른 쪽이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나 노력이 부족한 행동이 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완전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익숙한 설명 자체는 맞지만 정리의 번호를 제2정리로 바꾸었다. 제1정리와 제2정리의 방향을 뒤바꾼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쟁균형에서 효율성으로’ 가는 명제는 제1정리이고, ‘효율적 배분에서 적절한 재분배를 거쳐 경쟁균형으로’ 가는 명제는 제2정리로 구분한다. 시장실패 선지는 공공재의 비배제성·무임승차, 조세의 상대가격 왜곡, 정보 비대칭이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1정리: 경쟁균형 → 파레토 효율. 제2정리: 파레토 효율 → 재분배 후 경쟁균형.

NoteBase

문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 i의 후생은 wi, 사회후생은 W)

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 = w_1 + \cdots + w_n$가 된다.

② 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 = \frac{1}{\alpha}\sum_{i=1}^{n} w_i^{\alpha}$로 표현되는데, 이는 α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표현하면 $W = \min\{w_1, \cdots, w_n\}$로 나타낼 수 있다.

④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⑤ 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리주의·평등주의·롤즈주의 사회후생함수의 분배관과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후생의 총합을 사회후생으로 본다. 단순 합산형은 분배상태 자체를 고려하지 않지만, 한계사회후생가중치가 개인후생에 따라 감소하는 오목한 형태로 확장하면 평등한 분배를 선호한다.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후생이 낮은 사람의 후생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최약자 중시 기준이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일정한 합리성·공정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개인의 선호순위를 하나의 사회적 선호순위로 집계하는 일반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다.

선지별 해설

① O. 단순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후생을 같은 비중으로 합산하므로 $W = w_1 + \cdots + w_n$으로 나타낸다.
② O. $W = \frac{1}{\alpha}\sum_{i=1}^{n} w_i^{\alpha}$에서 $\alpha < 1$이면 함수가 오목해져 후생이 높은 개인일수록 한계사회후생가중치가 작아진다. 따라서 후생의 총량뿐 아니라 그 분배도 사회후생에 영향을 준다.
③ O. 롤즈식 기준은 최약자의 후생을 중시하므로 사회후생을 $W = \min\{w_1, \ldots, w_n\}$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O.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후생이 낮은 개인의 추가 후생에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다. 같은 뜻으로 개인후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한계사회후생가중치는 작아진다.
⑤ X. 틀린 표현은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이다. 애로우는 일정한 조건 아래 개인의 선호를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로 집계하는 사회후생함수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애로우의 결론을 '불가능'에서 '존재'로 뒤집고, 이론적 증명을 '실증'이라고 바꾸었다. 또한 ①의 단순 합산형과 ②의 분배를 고려하는 오목한 확장형을 같은 것으로 보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후생함수는 무엇을 사회적 판단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한다. 총합이면 공리주의, 최약자의 후생이면 롤즈주의, 낮은 후생에 더 큰 한계가중치를 주면 평등주의이다. 애로우는 바람직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호집계 방식의 존재가 아니라 불가능성을 보인 학자이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합, 롤즈는 최솟값, 평등주의는 저후생자에게 큰 가중치, 애로우는 불가능성이다.

NoteBase

문 23.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송아지의 구입 가격은 200,000 이고, 1년 후에 팔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목 송아지 수(A)와 개별 주민 입장에서의 최적 방목 송아지 수(B)는? (단, 송아지의 1년 뒤 가격 P =1,600,000−50, 000Q, Q: 방목하는 송아지 수)

① A: 12, B: 12

② A: 13, B: 16

③ A: 14, B: 28

④ A: 15, B: 29

⑤ A: 16, B: 3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유 목초지에서 마을 전체의 이윤 극대화 조건과 개별 주민의 자유로운 방목에 따른 진입 균형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최적에서는 가격 하락이 기존 송아지 전체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지만, 개별 주민은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조건 정리

송아지 한 마리의 구입비용은 200,000원이다. 1년 뒤 한 마리당 판매가격은 $P(Q) = 1,600,000 - 50,000Q$ 이다. 구해야 할 값은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목 수 A와 개별 주민의 유인에 따라 결정되는 방목 수 B 이다.

사용할 공식

마을 전체의 총이윤은 $\pi(Q) = [P(Q) - 200,000]Q = (1,400,000 - 50,000Q)Q$ 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은 총이윤의 한계변화가 0인 조건으로 구한다. 반면 개별 주민은 자신이 송아지 한 마리를 더 방목해 전체 판매가격을 떨어뜨리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진입이 멈추는 $P(Q) = 200,000$에서 방목 수가 결정된다.

계산 과정

1. 마을 전체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frac{d\pi}{dQ} = 1,400,000 - 100,000Q = 0$ 이므로 $A = 14$이다.
2. 개별 주민 입장에서는 한 마리의 판매수입과 구입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방목한다.
$1,600,000 - 50,000Q = 200,000$ 이므로 $B = 28$이다.
3. 따라서 $A = 14, B = 2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A: 12, B: 12’는 두 값 모두 틀리다. 전체 이윤의 한계조건과 개별 진입의 손익분기 조건을 적용하면 ‘A: 14, B: 28’이 된다.
② X — ‘A: 13, B: 16’은 두 조건에서 계산되는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A: 14, B: 28’이다.
③ O — ‘A: 14, B: 28’은 각각 총이윤 극대화 조건 $1,400,000 - 100,000Q = 0$과 개인의 진입 균형 조건 $P(Q) = 200,000$에서 나온다.
④ X — ‘A: 15, B: 29’는 사회적 최적과 개인의 진입 균형을 각각 1마리씩 크게 잡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A: 14, B: 28’이다.
⑤ X — ‘A: 16, B: 30’은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A: 14, B: 28’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사회적 최적과 개별 선택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최적에서는 방목 증가로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모든 송아지의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하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개별 주민은 이 가격 하락 효과를 다른 주민과 함께 부담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판매가격과 구입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진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유자원 문제에서는 먼저 전체 총이윤을 세워 미분한 값으로 사회적 최적을 구하고, 다음으로 개인의 평균수입과 사적 비용이 같아지는 조건으로 자유진입 균형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자유진입 방목량이 사회적 최적 방목량보다 크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최적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 공유자원의 자유진입 균형은 평균수입과 비용의 일치이다. 이 문항에서는 14 대 28이다.

NoteBase

문 24.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효율적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해도 해당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③ 산업이 대규모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⑤ 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는 기존 비용체감산업의 성격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근거와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학적 근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체감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져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산업이다. 이러한 자연독점에서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배분 효율성을 높이지만 평균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 운영의 핵심 근거는 이와 같은 시장실패의 보완이고, 민영화의 근거는 기술 변화 등으로 자연독점성이 약해져 경쟁 도입이 가능해지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효율적인 한계비용 가격규제를 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민간 기업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이며, 올바르게는 '손실이 발생하여 민간 기업이 공급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이다.

② X
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가 아니라 자연독점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틀린 표현은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며, 올바르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주요 목적'이다.

③ X
산업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공기업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산업이 대규모인 경우'이며, 올바르게는 '규모의 경제로 자연독점이 발생하거나 공공성·외부성 등 시장실패가 큰 경우' 공기업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X
민영화는 소유자의 감시와 이윤 유인을 강화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틀린 표현은 '사라진다'이며, 올바르게는 '완화될 수 있다'이다.

⑤ O
기술 발전이나 시장 여건의 변화로 최소효율규모가 작아지고 자연독점성이 약해지면 여러 기업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존 비용체감산업의 성격 변화는 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독점기업의 무규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초과이윤과 한계비용 가격규제 뒤의 손실을 뒤바꾼다. ③은 '대규모 산업'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고, ④는 대리인 문제의 완화와 완전한 소멸을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기업 운영의 근거를 묻는 경우 단순한 기업 규모나 재정수입이 아니라 자연독점·외부성·공공성 같은 시장실패를 확인한다. 민영화의 근거를 묻는 경우 기술 변화로 자연독점성이 약화되었는지, 경쟁과 감시 유인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용체감산업은 자연독점, 한계비용 가격은 손실 가능, 자연독점성 약화는 민영화 근거이다.

NoteBase

문 25. 4가구(가 ~ 라)가 있는 마을에서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가)는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는 농가이고, (나)는 다리를 이용하여 강 건너 직장에 출퇴근하여 500의 총편익을 얻는다. 다리 이용에 따른 (다)의 총편익은 $400 + 30M + 20M^3$이고 (라)의 총편익은 $300 + 70M + 30M^3$이다. 이때 다리의 총건설비용은 $3,850M + 700$이다. 다리의 적정 규모 M은? (단, M: 다리규모)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출제 의도상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규모를 구하는 문제이다. 다만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는 내부해의 일차조건일 뿐이므로, 순총편익이 실제로 극대화되는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조건 정리

다리는 여러 가구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이므로 각 가구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한다. (가)는 다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계편익이 0이다. (나)의 총편익 500은 다리 규모 M과 무관한 상수이므로 한계편익이 0이다. (다)와 (라)의 총편익만 M에 따라 변한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내부 최적해에 필요한 일차조건은 다음과 같다.

$\sum MB_i = MC$

총편익을 다리 규모 M으로 미분하면 각 가구의 한계편익이 되고, 총건설비용을 M으로 미분하면 한계비용이 된다. 다만 이 조건이 순총편익의 극대점을 보장하려면 이차조건이나 경계값·선택지별 순총편익도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다)의 한계편익은 $30 + 60M^2$, (라)의 한계편익은 $70 + 90M^2$이므로 사회적 한계편익은
$(30 + 60M^2) + (70 + 90M^2) = 100 + 150M^2$
이다. 총건설비용 $3{,}850M + 700$의 한계비용은 3,850이다. 출제 의도에 따른 일차조건은
$100 + 150M^2 = 3{,}850$
$150M^2 = 3{,}750, \quad M^2 = 25$
이므로 양의 해는 $M = 5$이고 공식답은 ④이다.
그러나 사회적 총편익과 순총편익은 각각
$TB(M) = 1{,}200 + 100M + 50M^3$
$NB(M) = TB(M) - (3{,}850M + 700) = 500 - 3{,}750M + 50M^3$
이다. 따라서
$NB'(M) = -3{,}750 + 150M^2, \quad NB''(M) = 300M$
이며 $NB''(5) = 1{,}500 > 0$이다. 그러므로 $M = 5$는 순총편익의 극대점이 아니라 극소점이다. 또한 제시된 규모 $M = 2, 3, 4, 5, 6$의 순총편익은 각각 $-6{,}600$, $-9{,}400$, $-11{,}300$, $-12{,}000$, $-11{,}200$이므로 선택지만 엄밀히 비교하면 $M = 2$가 가장 크다.

선지 판단

① X(출제 의도) — $M = 2$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0 + 150(2^2) = 700$으로 한계비용 3,850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지별 순총편익을 비교하면 $-6{,}600$으로 다섯 선택지 중 가장 크다.
② X — $M = 3$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0 + 150(3^2) = 1{,}450$이고 순총편익은 $-9{,}400$이다.
③ X — $M = 4$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0 + 150(4^2) = 2{,}500$이고 순총편익은 $-11{,}300$이다.
④ O(공식 채점) — $M = 5$이면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모두 3,850이어서 출제 의도의 일차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순총편익은 $-12{,}000$이고 이 점은 극소점이다.
⑤ X — $M = 6$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0 + 150(6^2) = 5{,}500$이고 순총편익은 $-11{,}200$이다.
따라서 공식 채점은 ④이지만, 주어진 함수로 순총편익을 엄밀히 극대화하면 선택지 중 ①이 도출되어 공식답과 충돌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 의도상 함정은 총편익 자체를 총비용과 비교하거나 규모와 무관한 (나)의 편익 500을 한계편익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일차조건만으로 최적 규모를 확정해서도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순총편익의 이차미분이 $M = 5$에서 양수이므로 해당 규모는 극대점이 아니라 극소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개인별 총편익을 각각 미분해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하고 한계비용과 같게 놓아 내부 후보를 구한다. 그다음 순총편익의 이차미분, 경계값 또는 허용된 선택지별 순총편익을 비교해 그 후보가 실제 극대점인지 확인한다. 규모와 무관한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지만 순총편익의 수준을 비교할 때는 포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공재의 내부 최적해는 $\sum MB_i = MC$를 만족해야 하지만, 이것은 일차조건이다. 순총편익 극대화를 확정하려면 이차조건과 경계값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문 26.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은 0(*zero*)이 됨을 의미한다.

② 순수 공공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③ 대부분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④ 클럽재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를 구분하는 두 기준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리고 순수 공공재·클럽재의 성격과 무임승차 문제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아 추가 소비자를 수용하는 한계비용이 0인 성질이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가지며, 클럽재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혼잡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경합적 재화는 추가 소비자의 이용이 기존 소비자의 이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추가 소비에 드는 한계비용이 0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배제성'이다.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부분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와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이다. 현실의 공공재에는 혼잡이나 부분적 배제가 가능한 비순수 공공재가 많으며,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공급되기 쉽지만 시장이 언제나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이다. 클럽재는 요금이나 회원 자격 등으로 비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고, 혼잡 전까지 소비가 비경합적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이다. 비배제성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피하면서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을 가지므로 자신의 진정한 지불의사나 수요를 과소표출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배제성과 비배제성을 바꾸어 놓았고, ④는 클럽재의 핵심인 배제 가능성을 반대로 서술했다. 또한 ③의 시장실패는 시장의 완전한 부재와 같은 뜻이 아니라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현상을 포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소비를 막을 수 있는지로 배제성을,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지로 경합성을 판단한다. 그다음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적·비경합적, 클럽재는 배제 가능·혼잡 전 비경합적이라는 조합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 클럽재는 배제 가능·비경합,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와 수요 과소표출을 낳는다.

NoteBase

문 27.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한다. 공공재의 총공급 비용은 $TC = 36Q$ 이며, 갑, 을, 병 각각의 수요함수는 $Q = 30 - P$, $Q = 35 - P/2$, $Q = 40 - P/4$이다. 공공재 공급비용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할 때,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의한 공공재 공급량은? (단, Q: 수량, P: 가격)

① 29

② 30

③ 32

④ 35

⑤ 37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 비용을 균등 분담할 때 각 개인의 한계편익과 개인별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선호 공급량을 구하고, 단봉선호하의 다수결에서 중위투표자의 선호량이 꽁도세 승자가 된다는 점을 묻는다.

조건 정리

총비용은 $TC = 36Q$이므로 사회 전체의 한계비용은 $MC = 36$이다. 세 사람이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므로 한 사람의 비용부담은 $12Q$, 개인별 한계비용은 12이다.

사용할 공식

각 개인의 선호 공급량은 개인의 한계편익=개인별 한계비용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각 수요함수에 개인별 가격 $P = 12$를 대입한다. 단봉선호를 전제로 한 다수결에서는 세 사람의 선호 공급량 가운데 중윗값이 꽁도세 승자가 된다.

계산 과정

1. 갑: $Q = 30 - P = 30 - 12 = 18$이다.
2. 을: $Q = 35 - P/2 = 35 - 12/2 = 29$이다.
3. 병: $Q = 40 - P/4 = 40 - 12/4 = 37$이다.
4. 선호 공급량을 정렬하면 $18 < 29 < 37$이므로 중윗값은 29이다. $Q = 29$는 더 작은 공급량과 비교하면 을·병의 지지를 받고, 더 큰 공급량과 비교하면 갑·을의 지지를 받아 다수결에서 승리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29는 세 사람의 선호 공급량 18, 29, 37 가운데 중윗값이므로 꽁도세 방식의 공급량이다.
② X — 30은 중위투표자인 을의 선호 공급량이 아니다. 올바른 공급량은 29이다.
③ X — 32는 세 개인의 선호 공급량 가운데 중윗값이 아니다. 올바른 공급량은 29이다.
④ X — 35는 을의 수요함수에서 가격이 0일 때의 수량절편일 뿐, $P = 12$를 부담할 때의 선호량이 아니다. 올바른 공급량은 29이다.
⑤ X — 37은 병 개인의 선호 공급량이지만 중위투표자의 선호량은 아니다. 올바른 공급량은 29이다.

오답 포인트

총한계비용 36을 각 개인의 수요가격과 바로 비교하거나, 수요함수의 수량절편 30·35·40을 선호 공급량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균등 분담이므로 먼저 개인별 한계비용을 $36/3 = 12$로 바꾼 뒤 각자의 선호량을 구해야 한다. 또한 병의 최대 선호량 37이 아니라 세 선호량의 중윗값 29를 선택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균등 분담 공공재의 다수결 문제는 총한계비용을 인원수로 나누어 개인별 부담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을 각 수요함수에 대입한 다음, 개인별 선호 공급량을 정렬하여 중윗값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균등 분담가격은 MC/n, 꽁도세 공급량은 단봉선호 아래 개인별 선호량의 중윗값이다.

NoteBase

문 28. 공공재의 수요표출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ㄴ. 클라크 조세(Clarke tax)의 핵심은 개인이 부담할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호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ㄷ. 클라크 조세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ㄹ. 클라크 조세에서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수요표출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크 조세가 효율적 자원배분과 진실한 선호 표출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진실하게 밝히도록 유도하여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실현하려는 장치이다.
클라크 조세는 한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후생에 끼치는 외부효과를 그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개인의 세액을 자신의 신고액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표출 선호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자신의 신고를 조작하여 세액을 유리하게 바꿀 수 없고 진실한 선호 표출이 우월전략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모두 옳지만,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② X
ㄴ과 ㄷ은 모두 옳지만,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효율성 목적을 설명한 ㄱ과 세액 결정 기준을 설명한 ㄹ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③ X
ㄱ, ㄴ, ㄹ은 모두 옳지만, 진실한 선호 표출이 우월전략이라는 ㄷ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④ X
ㄱ, ㄷ, ㄹ은 모두 옳지만, 세액과 자신의 표출 선호를 분리한다는 ㄴ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⑤ O
ㄱ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목적, ㄴ과 ㄹ은 개인의 세액이 자신의 표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표출 선호에 의해 정해진다는 세액 설계, ㄷ은 그 결과 진실한 선호 표출이 우월전략이 된다는 유인 성질을 각각 정확히 설명한다. 따라서 네 진술이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ㄹ을 서로 다른 주장으로 보아 하나만 고르기 쉽지만, 두 진술은 같은 설계를 다른 방향에서 표현한다.
자신의 신고액과 세액을 분리한다는 ㄴ은 곧 세액을 다른 사람들의 표출 선호에 따라 정한다는 ㄹ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클라크 조세 문제에서는 목적, 세액 기준, 유인을 차례로 확인한다. 목적은 파레토 효율성, 세액 기준은 타인에게 끼친 외부효과, 유인은 진실한 선호 표출의 우월전략성이다.

암기 포인트

클라크 조세는 '내 신고와 내 세액을 분리하고, 타인에게 준 외부효과를 부담시켜, 진실한 선호 표출을 유도한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9.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서 관료제 조직은 가격순응자와 같이 행동한다.

②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는 공익추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③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규모를 늘린다.

④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에 따른 공공재의 초과공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에 따를 때의 초과공급보다 적다.

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산과 공급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니스카넨의 총예산 극대화 모형과 미그-빌레인저의 재량예산 모형을 구별하고, 관료제의 과잉공급을 줄이는 대응 방안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니스카넨 모형: 관료가 자신의 효용과 양(+)의 관계에 있는 총예산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관료제는 정보 우위와 독점적 공급 지위를 이용하며, 후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산출량과 예산을 확대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공공재를 과다 공급한다.
미그-빌레인저 모형: 관료가 예산 총액 자체가 아니라 총예산에서 최소생산비를 뺀 재량예산과 산출량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보는 모형이다. 재량예산을 남기기 위해 산출량 일부를 포기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으면 산출량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작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가격순응자와 같이 행동한다'이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제는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쟁적 공급자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이자 비용 정보의 우위를 가진 예산 극대화자로 행동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공익추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이다. 두 모형은 모두 관료를 자기효용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본다. 니스카넨 모형은 총예산 극대화,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재량예산과 산출량을 통한 효용 극대화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예산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이다. 그 수준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이다. 니스카넨의 관료는 후원자의 총편익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최대 산출량까지 예산과 공급을 확대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니스카넨 모형의 초과공급이 '더 적다'는 부분이다. 미그-빌레인저 모형에서는 관료가 재량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량 일부를 포기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으면 공공재 공급량과 초과공급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작다. 따라서 니스카넨 모형의 초과공급이 더 크다.
⑤ O —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되 생산·공급을 경쟁하는 민간기업에 맡기면 관료제의 독점적 생산과 정보 우위를 약화하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니스카넨 모형이 예측하는 예산 및 산출량 팽창에 대응하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회적 최적 조건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를 니스카넨 관료의 선택 조건으로 바꿔 놓았다. ④는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재량예산을 위해 산출량을 줄인다는 점을 이용해 두 모형의 초과공급 크기를 반대로 제시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예산 극대화·총편익과 총비용의 일치·큰 초과공급'이면 니스카넨, '재량예산·총예산과 최소생산비의 차액·상대적으로 작은 산출량'이면 미그-빌레인저로 판단한다. 관료제 통제 방안에서는 경쟁 도입, 민간위탁, 성과와 비용의 감시가 독점적 공급자의 예산 팽창을 줄이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니스카넨은 총예산과 큰 과잉공급, 미그-빌레인저는 재량예산과 상대적으로 작은 산출량이다.

NoteBase

문 30.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부권투표제
ㄴ. 보다(Borda)투표제
ㄷ. 점수투표제
ㄹ. 투표거래(logrolling)
ㅁ. 만장일치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순히 찬반이나 1순위만 표시하는 제도와 선호의 상대적 강약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다(Borda)투표제는 각 대안의 선호 순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 간 선호 차이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점수투표제는 투표자가 대안별로 점수를 주므로 선호의 강도를 직접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다.
투표거래(logrolling)는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투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안을 더 강하게 선호하는 사람이 그 사안에 표를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거부권투표제와 만장일치제는 각각 거부권 행사와 전원 동의를 핵심으로 하므로 개인별 선호 강도를 점수나 투표 교환으로 표현하는 제도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거부권투표제가 잘못 포함되어 있다. 거부권투표제는 특정 대안을 배제할 권리를 주는 방식이지 선호 강도를 차등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을 ㄹ의 투표거래로 바꾼 'ㄴ, ㄷ, ㄹ'이다.
② X — ㄱ의 거부권투표제가 잘못 포함되어 있다. ㄷ의 점수투표제와 ㄹ의 투표거래는 선호 강도를 반영하지만 거부권투표제는 그렇지 않다. 올바르게는 ㄱ을 ㄴ의 보다투표제로 바꾼 'ㄴ, ㄷ, ㄹ'이다.
③ O — 보다투표제는 순위별 차등 점수, 점수투표제는 대안별 점수, 투표거래는 사안별 투표 교환을 이용하므로 세 제도 모두 선호의 강약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X — ㅁ의 만장일치제가 잘못 포함되어 있다. 만장일치제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동의의 강도를 차등적으로 측정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ㅁ을 ㄷ의 점수투표제로 바꾼 'ㄴ, ㄷ, ㄹ'이다.
⑤ X — ㅁ의 만장일치제가 잘못 포함되어 있다. ㄷ의 점수투표제와 ㄹ의 투표거래는 선호 강도를 반영하지만 만장일치제는 찬반 여부를 전원 동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올바르게는 ㅁ을 ㄴ의 보다투표제로 바꾼 'ㄴ,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거부권이나 만장일치가 강한 의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말하는 선호 강도의 반영은 대안별 차등 점수나 사안 간 투표 교환처럼 선호의 강약이 집계 결과에 차등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표자가 대안에 차등 점수를 주거나, 더 중시하는 사안에 표를 집중·교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순위별 점수를 쓰는 보다투표제, 직접 점수를 주는 점수투표제, 표를 교환하는 투표거래는 포함하고, 단순 거부권과 전원 동의 요건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선호 강도 반영은 '보다의 순위점수, 점수투표의 직접점수, 로그롤링의 표 교환'이다.

NoteBase

문 31.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유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외부경제효과이다.

② 경유 소비에 대해 토빈세(Tobin tax)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다.

③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 소비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하다.

④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이어야 한다.

⑤ 조세부과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대기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시장의 경유 소비량과 사회적 적정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구세의 적정 크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불경제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보상 없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이때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 소비량은 사회적 적정 소비량보다 많아진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하는 교정세이다. 최적 피구세는 사회적 적정 소비량에서의 한계외부피해와 같게 설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기오염으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불경제이다. 틀린 표현은 '외부경제효과'이며, 올바르게는 '외부불경제효과'이다.
② X — 토빈세는 본래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안된 것이므로 대기오염 외부성을 교정하는 세금의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토빈세'이며, 올바르게는 경유 소비의 한계외부피해에 상응하는 '피구세'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X — 대기오염의 외부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비용이 사회 전체의 비용보다 작아져 경유가 과다 소비된다. 틀린 표현은 '과소하다'이며, 올바르게는 경유 소비가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다'이다.
④ O — 부정적 외부효과를 정확히 내부화하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에서 피구세를 한계외부피해액과 같게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직면하는 한계비용에 외부피해가 반영된다.
⑤ X — 적정한 피구세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시장의 소비량을 사회적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이며, 올바르게는 적정한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토빈세'와 '피구세'를 혼동하거나, ③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시장 소비량이 과소하다고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핵심은 외부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이 낮아져 과다 소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외부불경제로 판단한다. 이어서 시장에서는 과다 생산·과다 소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적정량에서의 한계외부피해만큼 피구세를 부과하면 외부효과가 내부화된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의 과다 소비를 낳고, 최적 피구세는 적정량에서의 한계외부피해와 같다.

NoteBase

문 32. 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비용은 $MC = 100 + Q$이고, 수요곡선은 $P = 1,300 - 10Q$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 = Q$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정조세(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가격, Q: 수량)

①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②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③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⑤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frac{1,200}{11}$ ℓ 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에 한계피해를 포함하여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구하고,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만큼 교정조세를 부과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편익은 수요곡선인 $MB = P = 1,300 - 10Q$이다. 사적 한계비용은 $MC = 100 + Q$, 한계피해는 $MD = Q$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MC + MD = 100 + 2Q$이다. 구해야 할 값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그때의 가격, 단위당 교정조세 및 조세 부과 전후 생산량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최적 조건은 $MB = SMC = MC + MD$이다. 최적 교정조세는 사회적 최적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이므로 $t = MD(Q^*)$이다. 외부피해가 생산량에 따라 발생하므로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피해를 더해야 사회가 실제로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반영된다.

계산 과정

1.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300 - 10Q = 100 + 2Q$에서 구한다. 따라서 $1,200 = 12Q$, $Q^* = 100$이므로 100ℓ이다.
2. 최적생산량에서의 가격은 $P = 1,300 - 10(100) = 300$이다.
3. 최적 교정조세는 $t = MD(100) = 100$이다.
4. 조세가 없으면 $MB = MC$이므로 $1,300 - 10Q = 100 + Q$, 즉 $Q = \frac{1,200}{11}$이다.
5. 단위당 100의 조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한계비용은 $MC + t = 200 + Q$이다. 따라서 $1,300 - 10Q = 200 + Q$에서 $Q = \frac{1,100}{11} = 1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MB = MC + MD$를 풀면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② O. $Q^* = 100$을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가격은 300이다.
③ O. 최적생산량에서 한계피해가 100이므로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가 필요하다.
④ O. 조세가 없을 때 생산량은 $\frac{1,200}{11}\ell$로 사회적 최적생산량 100ℓ보다 크므로 과다 생산된다.
⑤ X.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생산량은 $\frac{1,200}{11}\ell$'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생산량은 $\frac{1,100}{11} = 100\ell$이고, $\frac{1,200}{11}\ell$는 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생산량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무세금 경쟁균형 생산량 $\frac{1,200}{11}$을 교정조세 부과 후 생산량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조세 부과 후에는 기업의 한계비용에 단위당 조세 100을 더해야 하므로 우변이 $100 + Q$가 아니라 $200 + Q$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 문제는 먼저 $SMC = MC + MD$로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구하고, 그 생산량에서 $t = MD(Q^*)$를 계산한 다음, 조세 부과 후 기업의 조건 $P = MC + t$로 생산량이 최적 수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에서는 $SMC = MC + MD$, 최적 교정조세는 $t = MD(Q^*)$이다.

NoteBase

문 33. 강 상류에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와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 간에 상류의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외부성을 해결하는 타당한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한다.
ㄴ. 오염배출권을 발행하여 거래한다.
ㄷ. 축산농가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ㄹ.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허용치를 설정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부정적 외부성을 해결하는 시장적 수단과 직접규제 수단을 모두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성은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소유권 설정은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는 총배출량을 제한한 뒤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여 감축비용이 낮은 주체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는 시장적 수단이다.
환경세는 오염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오염자가 외부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하는 시장적 수단이다.
오염 허용치 설정은 정부가 배출 또는 오염의 상한을 정하는 직접규제 수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소유권 설정과 ㄴ의 오염배출권 거래는 모두 외부성 해결수단이지만, ㄷ의 환경세와 ㄹ의 오염 허용치 설정이 빠진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② X
ㄷ의 환경세와 ㄹ의 오염 허용치 설정은 모두 타당하지만, ㄱ의 소유권 설정과 ㄴ의 오염배출권 거래가 빠진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③ X
ㄱ은 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ㄴ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을 유도하며, ㄷ은 외부비용을 세금으로 내부화하므로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ㄹ의 오염 허용치 설정도 직접규제에 의한 해결수단인데 이를 제외한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④ X
ㄴ의 오염배출권 거래, ㄷ의 환경세, ㄹ의 오염 허용치 설정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ㄱ의 소유권 설정도 권리의 귀속을 분명히 하여 당사자 간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수단인데 이를 제외한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⑤ O
ㄱ은 소유권 설정을 통한 협상, ㄴ은 거래 가능한 오염배출권, ㄷ은 환경세를 통한 외부비용의 내부화, ㄹ은 오염 허용치에 의한 직접규제에 해당한다. 네 항목 모두 부정적 외부성을 해결하는 타당한 방안이다.

오답 포인트

시장적 수단만 외부성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ㄹ을 제외하기 쉽다. 오염 허용치 설정도 정부가 오염 수준을 직접 제한하는 전형적인 해결수단이다. 또한 이 문항의 ①~④는 포함된 항목이 틀린 것이 아니라 타당한 방안을 하나 이상 누락한 조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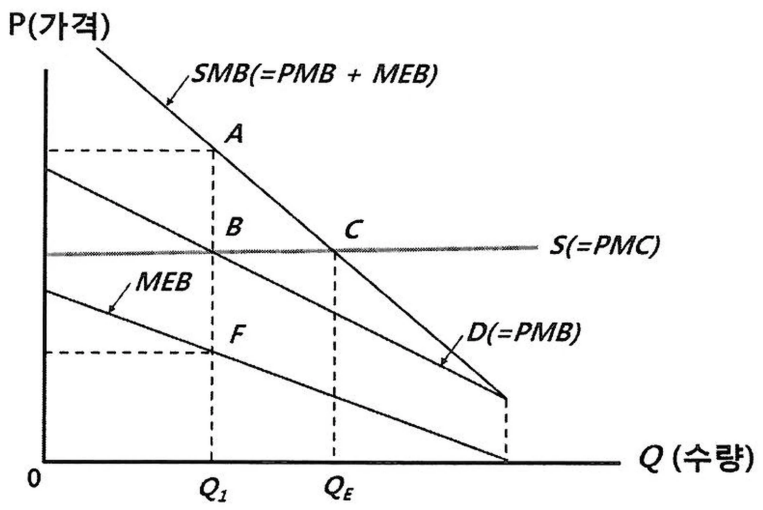
각 항목을 소유권·협상, 배출권 거래, 조세에 의한 내부화, 직접규제 중 하나로 분류한 뒤 타당성을 개별 판단한다.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옳은 항목의 누락 여부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성 해결의 네 갈래는 소유권 설정, 배출권 거래, 환경세, 직접규제이다.

NoteBase

문 34.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D: 수요곡선, PMB: 사적 한계편익, S: 공급곡선, PMC: 사적 한계비용, MEB: 한계외부편익, SMB: 사회적 한계편익)



◯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시장균형은 $PMB = PMC$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의 생산량은 SMB>PMC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과소하다.
◯ 시장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비용의 크기는 삼각형 ABC에 해당한다.
◯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 생산량을 Q_E로 증가시킴에 따른 사회적 순이득(net gain)은 삼각형 ABC와 같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비의 외부편익이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과 한계외부편익의 합이므로 $SMB = PMB + MEB$ 이다. 도표에서 시장균형 수량 Q_1과 사회적 최적 수량 Q_E를 비교하여 각 진술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문장별 판단

첫째 문장 O

- 도표에서 *SMB*가 *PMB*보다 위에 있고 그 차이가 *MEB*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둘째 문장 O

- 시장은 소비자의 사적 한계편익 *PMB*와 사적 한계비용 *PMC*가 같은 B점에서 균형을 이루어 Q_1을 생산한다. 이때 $SMB > PMC$이므로 생산을 늘리면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하며,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과소하다.

셋째 문장 O

- 시장균형 수량 Q_1부터 사회적 최적 수량 Q_E까지 *SMB*가 *PMC*보다 큰데도 생산되지 않는다. 이 구간의 미실현 순편익, 즉 사중손실은 *SMB*와 *PMC* 사이의 삼각형 ABC이다.

넷째 문장 X

- 틀린 표현은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이다. 시장균형 B에서는 $PMB = PMC$이므로 사적 유인에 따른 생산량 변화 압력이 없다. 올바르게는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이다.

다섯째 문장 O

- 생산량을 Q_1에서 Q_E까지 늘릴 때 각 단위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이를 합한 사회적 순이득은 두 곡선 사이의 삼각형 ABC와 같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문장은 첫째·둘째·셋째·다섯째의 4개이므로 '1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② X
- 옳은 문장이 4개이므로 '2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③ X
- 옳은 문장이 4개이므로 '3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④ O
- 첫째·둘째·셋째·다섯째 문장이 옳고 넷째 문장만 틀리므로 '4개'가 맞다.

⑤ X
- 넷째 문장이 틀렸으므로 '5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오답 포인트

사회적으로 과소생산된다는 사실과 시장 안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는 주장을 혼동하기 쉽다. 외부편익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는 증산이 바람직하지만, 시장 참여자는 *SMB*가 아니라 *PMB*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B점에서는 사적으로 이미 균형이어서 자발적인 증산 압력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장균형은 $PMB = PMC$, 사회적 최적은 $SMB = PMC$로 찾는다. 소비의 외부편익에서는 $SMB > PMB$이므로 시장수량이 사회적 최적수량보다 작고, 두 수량 사이에서 *SMB*와 *PMC* 사이의 면적이 사중손실이자 최적수량까지 늘릴 때의 사회적 순이득이 된다.

암기 포인트

소비의 외부편익: $SMB = PMB + MEB$, 시장은 과소생산, 사중손실은 *SMB*와 *PMC* 사이의 삼각형이다.

NoteBase

문 35.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위 20%의 소득이 서로 같은 A, B국이 있을 때, A국의 10분위분배율이 1/2이고 B국의 5분위배율이 2라면, 하위 20%의 소득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②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③ 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수록, 해당 사회에 대한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는 높게 나타난다.

④ 조세 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5분위배율은 하락한다.

⑤ 소득이 완벽히 평준화된 사회에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10분위분배율과 5분위배율의 분자·분모를 구분하고, 지니계수·앳킨슨 지수·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소득분배 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A국과 B국의 상위 20% 소득을 공통으로 S라고 둔다.

사용할 공식

10분위분배율=하위 40% 소득상위 20%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두 지표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각 비율의 분자와 분모를 정확히 대입해야 한다.

계산 과정

A국은 10분위분배율이 1/2이므로 하위 40% 소득이 $S/2$이다. 하위 20%의 소득은 그다음 20%의 소득보다 클 수 없으므로 하위 40% 소득의 절반 이하, 즉 $S/4$ 이하이다. B국은 5분위배율이 2이므로 S/하위 20% 소득=2이고, 하위 20% 소득은 $S/2$이다. 따라서 A국의 하위 20% 소득은 B국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더 작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A국의 하위 20% 소득은 $S/4$ 이하이고 B국의 하위 20% 소득은 $S/2$이므로, ‘A국이 B국보다 크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국의 하위 20% 소득이 B국보다 작다고 해야 한다.
② O.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므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③ O. 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더 볼록하다는 것은 사회가 불평등을 더 싫어한다는 뜻이다. 불평등 회피도가 클수록 동일한 소득분배에 대한 앳킨슨 지수는 높아진다.
④ O. 누진성이 강화되면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비율인 5분위배율이 하락한다.
⑤ O.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이 일치하므로 로렌츠곡선은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10분위분배율과 5분위배율의 분자·분모가 서로 반대라는 점을 노린 선지이다. 특히 A국의 10분위분배율로 구해지는 것은 하위 20%가 아니라 하위 40%의 소득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배지표 문제에서는 먼저 각 지표를 분수로 쓴 뒤 공통인 상위 20% 소득을 하나의 문자로 둔다. 하위 40%에서 하위 20%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20% 소득이 그다음 20% 소득보다 클 수 없다는 소득순위 조건까지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상위 20%, 5분위배율은 상위 20%/하위 20%이다. 지니계수·앳킨슨 지수·5분위배율은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고, 완전평등의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다.

NoteBase

문 36.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② 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④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득재분배정책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누진소득세,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재원·수급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과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산·소득 등 필요성 심사를 거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수급 여부는 수급자가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생활 곤란과 법정 선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선지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쓴 말이다.
② O —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후 가처분소득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 기능을 한다.
③ X —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부분이 틀렸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지만 수급자 개인의 납세 여부를 급여의 대가로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회보험은 가입·기여를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공공부조는 생활 곤란의 정도와 소득·재산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이다. 또한 사회보험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이라고 절대화하기보다 피보험자 자격과 제도별 수급 요건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④ O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므로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에 해당한다.
⑤ O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단순한 월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세금을 낸 사람만 받는다'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재원의 출처와 수급자 선정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보험은 가입·기여와 사회적 위험을, 공공부조는 조세 재원·필요성 심사·최저생활 보장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 재원'이라는 말만으로 개인의 납세 실적이 수급 요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기여 중심, 공공부조는 필요 중심이다.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납세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NoteBase

문 3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③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는데, 납부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④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이다.

⑤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

정답 3번

쟁점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직역연금 가입자의 적용 제외, 재정방식, 보험료 분담 및 국민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운용하고 그 기금과 운용수익을 연금급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별도의 직역연금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총 9%이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어 연금급여 재원으로 사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원칙적인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이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 대상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희망만으로 두 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③ O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며, 적립된 기금과 운용수익을 연금급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적립방식의 성격을 가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이며, 합계 보험료율은 9%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이다. 은퇴효과는 조기 은퇴로 길어진 은퇴기간에 대비하게 하므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고, 상속효과도 자녀 세대의 부담을 보전하려는 유산 동기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킨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기금 적립·운용 구조를 부과방식과 혼동하거나, ④의 총보험료율 9%를 가입자와 사용자의 개별 부담률로 잘못 읽기 쉽다. 또한 ⑤에서는 자산대체효과의 저축 감소 방향을 은퇴효과와 상속효과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도 수치는 '가입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보험료 총 9%, 근로자·사용자 각 4.5%'로 묶어 판단한다. 저축효과는 자산대체효과는 감소,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증가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연금은 18~59세,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 사업장은 4.5%+4.5%, 은퇴·상속효과는 저축 증가이다.

NoteBase

문 38.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문제 때문

②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③ 온정주의(paternalism) 때문

④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⑤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보험의 도입 근거와 보험 가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보험은 질병·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정부가 가입과 급여를 제도화한 보험이다. 민간보험시장의 역선택 완화, 개인의 과소 대비를 교정하는 온정주의, 무보험이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외부효과의 완화, 소득재분배는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예방 노력을 줄이거나 의료 이용을 늘리는 행동 변화이므로 사회보험의 도입 근거가 아니라 보험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역선택이 있으면 위험이 높은 사람만 민간보험에 남아 보험시장이 축소되거나 붕괴할 수 있다. 정부의 의무가입과 광범위한 위험 분산은 이러한 역선택을 완화하는 근거가 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이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 조심성이 낮아지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사회보험이 이를 자동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회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등의 장치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이다.

③ O — 온정주의는 개인이 근시안적 판단 등으로 노후·질병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의무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확보하게 하는 근거이다.

④ O —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생계비가 가족, 납세자 또는 사회에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줄이는 것은 사회보험 도입의 근거가 된다.

⑤ O — 보험료와 급여를 소득 및 위험에 따라 설계하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위험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자원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가 도입 근거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보험시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한다'는 일반 논리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도 도입 근거처럼 보이게 한다. 역선택은 가입 전에 위험유형이 드러나지 않아 생기는 시장 실패인 반면,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이 바뀌어 생기는 보험의 부작용이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입 근거를 묻는 문항에서는 의무가입이 역선택·과소보험·외부효과·재분배 문제를 개선하는지 본다. 보험 가입 이후 의료 이용 증가나 예방 노력 감소를 말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역선택은 가입 전 시장 실패,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 변화이다. 사회보험은 전자를 완화하지만 후자를 낳을 수 있다.

NoteBase

문 39.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형으로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공식에 의한 신축성(formular flexibility),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등이 있다.

②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누진세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③ 자동안정장치는 시차문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안정장치에 비해 총수요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⑤ 자동안정장치는 불황기일 경우 재정긴축, 호황기일 경우 재정확장으로 작동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형과 자동안정장치·재량적 재정정책의 작동 방향 및 시차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동안정장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조세수입과 이전지출이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변하여 총수요의 변동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공식에 의한 신축성은 미리 정한 경제지표와 공식에 따라 재정수입·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기 상황을 판단하여 세율이나 정부지출 등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신속성이 강점이고, 재량적 재정정책은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책 결정과 집행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총수요관리 재정정책은 자동안정장치, 공식에 의한 신축성, 재량적 재정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O — 누진세제는 호황기에 세부담을 자동으로 늘리고 불황기에 줄이며, 실업보험은 불황기에 급여 지급을 늘려 총수요의 급변을 완화한다.
③ O — 자동안정장치는 별도의 입법이나 정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작동하므로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결정·집행 시차가 작다.
④ O —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입과 지출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므로 자동안정장치보다 경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불황기일 경우 재정긴축, 호황기일 경우 재정확장'이다. 실제로 자동안정장치는 불황기에 조세수입 감소와 이전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확장 방향으로, 호황기에 조세수입 증가와 이전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긴축 방향으로 작동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자동안정장치가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확장과 긴축을 뒤바꾸었다. 자동안정장치는 경기변동을 증폭하는 장치가 아니라 완화하는 장치이므로 불황에는 확장, 호황에는 긴축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조세와 이전지출이 변하면 자동안정장치, 사전에 정한 지표와 공식에 따라 조정하면 공식에 의한 신축성, 정부가 상황을 판단하여 직접 조정하면 재량적 재정정책이다. 작동 방향은 언제나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쪽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자동안정장치는 불황에 확장, 호황에 긴축이며,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빠르지만 능동성은 낮다.

NoteBase

문 4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파레토 보상기준이다.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사업보다 단기사업이 유리하다.

③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⑤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와 현재가치법, 편익-비용비율법, 내부수익률법의 판단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할인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 $NPV = PV(B) - PV(C)$가 클수록 유리하다고 본다.
편익-비용비율법은 $B/C = PV(B)/PV(C)$가 클수록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내부수익률법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고 이를 기준 할인율과 비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용편익분석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실을 보는 사람에게 보상하고도 남는지를 묻는 잠재적 파레토 개선, 즉 파레토 보상기준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할인율이 낮을수록 단기사업이 유리하다'이다. 실제로 할인율이 낮아지면 먼 미래의 편익이 덜 할인되므로 장기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총편익의 현재가치'이다.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이 아니라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순현재가치 NPV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그 값이 작을수록'이다. 편익-비용비율 B/C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⑤ X — 틀린 표현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1로'이다.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총편익과 순편익을, ④는 비율의 대소 방향을, ⑤는 순현재가치 0과 편익-비용비율 1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1'은 내부수익률의 기준이 아니라 편익-비용비율의 사업 타당성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기준의 이름과 기준값을 짝지어 판단한다. 현재가치법은 NPV의 크기, 편익-비용비율법은 B/C의 크기와 1, 내부수익률법은 $NPV = 0$이 되는 할인율을 본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먼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도 함께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가 클수록, 편익-비용비율법은 비율이 클수록,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NoteBase